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1.

법제처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국정과제, 2024년 법제처 업무계획의 중점 추진업무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평가 실시

○ 핵심 민생과제 · 협업과제 선정 및 집중관리

-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핵심 민생과제’ 및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협업과제’ 선정

* (핵심 민생과제) 1.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 · 관리 강화
7. 민생 회복과 불공정 · 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 (협업과제) 5.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역량 강화
19.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 추진성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설정

○ 적극성 ·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우대

- 적극성이 인정되고,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지표 달성도’에서 높은 점수 부여

- (적극성) 성과지표 목표치가 과거 3년 실적 평균의 120% 이상 또는 직전년도 110% 이상일 경우 적극성 인정

- (난이도 · 대표성) 결과지표 여부,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을 고려해 난이도를 평가하고,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정책내용을 반영한 지표 설정 시 평가 우대

○ 자체평가 결과 미흡 · 부진과제 관리 강화

- ’23년 자체평가 결과 미흡 · 부진과제, ’24년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 부진과제 외에도 모든 관리과제에 대해 개선 · 보완계획을 충실히 수립 ·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 환류 노력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내부(4명)·외부(14명) 위원 18명으로 구성, 법제처 성과관리 등 검토·평가
- 평가지원팀(기획재정담당관실 및 과제담당자): 자체평가 대상 이행 실적 자체점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평가업무 수행

□ 평가방법



- 상반기 실적 점검(7월) 및 매월(8~12월) 추진실적 점검 실시
- 자체평가위원 대상 부서별 ‘사업설명회’ 개최(’24. 12. 12.)
- 자체평가위원회 사전 서면심의 실시(’24. 12. 24.~’25. 1. 3.)
 - 주요정책 1·2소위 및 행정관리역량 특별소위 구성·운영
- 국민 체감도 조사 온라인 투표 실시(’24. 12. 26.~’25. 1. 6.)
- 서면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최종심의(’25. 1. 10.)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진행(’25. 1. 13.~14.) 및 최종결과 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19개

○ 평가지표

- 정책활동 단계에 따라 3개 항목·가점 등 10개 지표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형성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정책목표 및 수단의 구체성·적절성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분석, 정책효과·장단점 분석,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충실성	추진일정의 구체성·적절성 및 추진일정 준수 여부
	상황변화 대응성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여부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유관기관·국민·이해관계자와의 연계·소통 노력
정책성과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난이도,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정책효과 발생 여부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가점	주요 정부시책 기여도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기여도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	‘핵심 민생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추진성과
	협업과제 추진성과	‘협업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추진성과

【 '23년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형성 (23)	1-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10
	1-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13
정책집행 (17)	2-1.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4
	2-2. 상황변화 대응성	6
	2-3.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7
정책성과 (60)	3-1. 성과지표 달성도	35
	3-2.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
가감점 (±4)	4-1. 주요 정부 시책 기여	±3
	4-2. 핵심 관리과제 추진성과	±1



【 '24년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형성 (22)	1-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10
	1-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12
정책집행 (18)	2-1. 추진일정의 적절성·충실성	4
	2-2. 상황변화 대응성	6
	2-3.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8
정책성과 (60)	3-1. 성과지표 달성도	35
	3-2. 정책효과 발생 여부	25
가점 (+5)	4-1. 주요 정부 시책 기여	+3
	4-2. 핵심 민생과제 추진성과	+1
	4-3. 협업과제 추진성과	+1

2. 평가결과

(1) 총 평

□ '24년 총 24개 국·과(팀) 중 18개 국·과(팀)의 1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1개(5%), 우수 2개(11%), 다소우수 3개(16%), 보통 7개(36%), 다소미흡 3개(16%), 미흡 2개(11%), 부진 1개(5%)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및 시각화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이며,
 - 미흡 이하 과제는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인 것으로 평가됨.
- 핵심 민생과제 및 협업과제로 선정한 4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다소우수 이상 등급으로 평가되어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

* 7.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우수)

5.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역량 강화(다소우수)

1.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다소우수)

□ 총 19개 관리과제의 32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100%로, 전년 대비 향상

구분	'22년	'23년	'24년
성과목표 달성률	94%	99.6%	100%
총 성과지표 개수	37개	42개	32개
총 관리과제 수	21개	24개	19개

(2) 주요성과

-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등 3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Ⅲ-1-①)

【 주요성과 】

-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개통
 -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서비스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중 개선으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 선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 웹(PC), 모바일 앱 모두에서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시각장애인 및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 달성원인 】

-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법령검색 지능화
 - 법령 관련 질의답변 데이터셋 2만 건을 수집하고, AI 검색모델을 통한 반복 학습과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건을 제공하여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노력
 -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근무시간 외 이용자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음성 ARS 서비스 도입 등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Ⅱ-1-①)

【 주요성과 】

- 소상공인·중소기업 영업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정비
 - 자본금·자산기준 개선, 금전납부 부담 완화, 휴업신고 부담 완화,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등 영업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의 개선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 * 43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및 32개 대통령령·부령 등 개정 완료
-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 졸업예정자 조기자립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기회 확대
 - * 41개 대통령령·부령 개정 완료

【 달성원인 】

- 현장 중심의 정비주제 선정 및 과제 발굴 노력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관련 기관·단체 수요조사 등 정책 대상이 실제 필요로 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법령 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정비 추진
- 관계 부처 협의·소통 강화를 통한 법령 일괄정비 추진
 - 정비가 필요한 여러 법령 소관 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 증대

【 주요성과 】

- 법령 및 표준 약관·계약서·설명서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발굴·정비
 - 약관·계약서 등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문장 276건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312건 발굴·정비안 마련을 통해 법령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국민 중심의 법제 기반 구축
- 시각 콘텐츠를 법조문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실시
 - 일상생활에 밀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의 내용에 대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림·표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

【 달성원인 】

- 국민과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의 신뢰도 확보 노력
 - 국민 관심도를 반영한 대상 법령 선정 및 사업 효과성 확인을 위해 현장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 실시, 정비안 마련 시 법률·국어 전문가 참여, 콘텐츠 개발 시 소관 부처 협업 및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3) 개선·보완 사항

-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등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성과지표의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며, 행정자원 확보 및 활용 수단과 정책 형성 단계에서의 의견수렴,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실적이 미흡
 - (현장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국민관심법령 선정과 실제 국민참여심사 실시와의 연계성과 법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측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부족
 -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정책환경 분석의 충실성과 신규사업인 생활조례 서비스에 대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측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부족
- 성과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절한 정책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아울러, 성과지표 설정 시 적극성, 난이도 등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명)
1.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3등급(다소우수)
2. 정책과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령입안지원	4등급(보통)
3.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	4등급(보통)
4.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이견 조정·대응 기능 강화	4등급(보통)
5.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역량 강화	3등급(다소우수)
6.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7등급(부진)
7.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2등급(우수)
8.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5등급(다소미흡)
9. 기업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3등급(다소우수)
10. 미래시대를 대비한 법제개선	4등급(보통)
11. 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6등급(미흡)
12. 신속·정확한 법령검토로 현장 고충 해결	5등급(다소미흡)
13.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원활한 법 집행 지원	4등급(보통)
14.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1등급(매우우수)
15.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6등급(미흡)
16.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및 시각화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등급(우수)
17. 공무원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5등급(다소미흡)
18.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4등급(보통)
19.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4등급(보통)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3등급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의 기대가 높은 생활밀착형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법제화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 및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
-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뒷받침, 국법 체계 완결성 저해 문제 방지
- 국민이 제출한 입법의견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각 부처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 관리를 통하여 입법의견 처리율 상승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입법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 처리 집중 지원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상	○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설정되었고,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수단을 마련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부처 이견 사례 분석 우수 ○ 전문가 의견수렴은 보통 수준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부입법의 종합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연간 추진 일정을 적정한 수준으로 수립·관리함.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입법과정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연사유별 맞춤형 법제 지원 제공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필수·상시적인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협조 체계를 충실히 운영함.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고, 3개 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달성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하	○ 국정기조 및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나, 궁극적인 정책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는 다소 모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부 정책의 적기 시행을 위한 324개 법령안의 입안 및 법제화 추진을 차질 없이 뒷받침
- 국정과제 관련 법령안 중 신속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입안부터 공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 법제지원 실시
- 법령해석상 이견을 해소하는 법령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부처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해석상 이견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갈등 예방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환경 및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각 부처 담당자들이 입안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입법화 과정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수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보다 심층적인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바람직 ○ 정책환경 및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다소 미흡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연간 추진 일정에 적절히 배분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심도 있는 논의 및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대면방식의 상담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입법지원 요구에 대응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법제자문단 활용 바람직 ○ 언론 및 대국민 홍보도 중요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정책의 성격, 부처의 수요에 따라 최적화된 성과지표 ○ 지원 방법에 따라 차등화된 가중치 반영 등 적정한 난이도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	○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입안단계부터 심사까지 지원,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에 기여(이용자 ‘만족’ 이상 응답 비율 100%)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법안의 입법수요 및 제22대 국회 재추진 법안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간 입법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 부처 맞춤형 선제적 입법지원 실시
- 입안단계부터 정책의 조문화를 지원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주요 정책 법안이 조기에 국회에 제출되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국정과제 등 법안에 대한 예비검토 및 사후검토를 우선 지원하여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적극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게 설정되었고, 부처 수요에 맞는 법제지원은 목표 달성에 적정한 정책수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SWOT 분석을 통하여 약점 및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실히 마련하였으나, 계획 수립 시 자료 분석은 보통 수준 ○ 최신 입법 트렌드 분석 결과를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타 부서 회의 활용 계획도 일정에 포함
4. 상황변화 대응성	상	○ 재추진 계획 법률안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한 국회 발의를 지원, 일일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제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국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바람직 ○ 정책 고객에 대한 뉴스레터 송부 등 대국민 홍보 노력
6. 성과지표 달성도	하	○ 과제의 핵심적 정책내용을 반영한 지표로 대표성이 있으나, 목표치 설정에 대한 적극성 다소 부족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의원발의 법안의 품질 제고 및 신속한 국회 심사를 지원하여 완결성 높은 법안의 신속한 시행에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쟁점법안에 대한 범부처 대응 지원
-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의 이견을 적극 조정해 통일된 정부의견을 국회에 전달, 신속한 법제화 뒷받침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조정건수 및 조정 완료 비율 상승
 - 부처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등 협업체계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적극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정책목표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이 법안에 대한 이견 조정 기능 강화라는 문제 해소에 적절함. ○ 행정자원 확보 및 활용 수단이 다소 미흡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안에 대한 통계와 모니터링 결과를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 업무 추진 시 외에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사업계획 수립 전 관계기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수렴 필요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업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추진 일정 마련 및 준수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부처 간 이견 조정 노력 ○ 일상적인 모니터링 활동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상	○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노력 ○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체계 개선
6. 성과지표 달성도	하	○ 실질적으로 이견 조정이 되는 경우에만 가점이 부여되도록 지표를 설계한 점을 난이도 판단에 고려 가능하나, 목표치 설정에 대한 적극성 다소 부족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이견 조정 실적이 실제 국회 통과 법안에 반영되는 등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에 적극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방재정사무의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 정비과제 61건 및 자치권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정비과제 21건 발굴·확정
 -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 보고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정비 추진
-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제상담 119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법제 종합 지원 실시
- 지방자치단체 법제자문관 파견으로 현장 맞춤형 밀착지원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역량 강화 제고방안 발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상	○ 기관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설계 ○ 행정규칙 심사 담당 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비 과제 발굴 및 정비 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자체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응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추진 일정을 연중 적절히 배분하고, 지원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일정을 맞춤형으로 수립 ○ 외부 요인으로 일부 일정 다소 지연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갈등 조정제도 도입 우수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상	○ 법제자문관 파견을 통한 중앙-지방 간 인적협력체계 바람직 ○ 중앙-지방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정비체계 운영 우수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대표성을 갖춘 지표 ○ 의견제시 만족도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할 필요성 검토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자치입법권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자치법규 마련 전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대안 제공으로 자치법규 속 규제를 차단하고 주민권익 증진
- 상위법령과 함께 국가법령 체계를 구성하는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상위법령상 정책이 지방에 원활하게 구현되도록 지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배점이 높은 평가지표(자체평가 결과 환류의 충실성) 점수 미흡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이행 여부 등 충실한 환류 실적이 모호하고, 지적사항 일부 반복 지적*

* 대국민 소통 실적이 다소 미흡한 편으로, 홍보 노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언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하	○ 행정자원 확보 및 활용 수단 미흡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하	○ 적극적 의견수렴 활동 내역 미흡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상시 업무 및 분기별 업무 일정을 배분하여 추진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지방자치단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밀착형 입법컨설팅으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하	○ 언론 및 대국민 홍보도 중요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성과지표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하	○ 자체평가 결과 환류 실적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자본금 및 자산기준 개선, 금전납부 부담 완화, 휴업신고 부담 완화, 영업취소사유 합리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영업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의 개선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 43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및 32개 대통령령·부령 등 개정 완료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및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 졸업예정자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를 통하여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부담 완화 및 사회 진출 기회 확대

* 41개 대통령령·부령 개정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정책목표의 의의 제시 우수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상	○ SWOT 분석을 통하여 대내외 환경을 파악하고 정책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추진방향 설정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분기별·월별로 구체적으로 일정 수립, 연중 고르게 분배
4. 상황변화 대응성	상	○ 부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으로 실효성 있는 협의 진행, 부처 설득·재협의 등을 통해 상황변화 적극 대응 노력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상	○ 현장간담회, 국민법제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 ○ 정책 수혜자가 법령 개선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실시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과제 발굴 후 확정을 위한 부처 설득 과정의 어려움 등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투입 노력 우수 ○ 성과지표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설정할 필요성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	○ 소상공인·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가시적인 정책효과 기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행정규칙 발령 전 위법성을 검토해 국민의 실생활과 기업 경제 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
-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33건을 발굴하여 정비 추진
- 행정규칙 제·개정 초기 단계에서 적법·타당한 행정규칙의 입안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으로 입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방대한 행정규칙 규모*에 비해 사전심사, 사후정비 및 관리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행정자원의 지원이 다소 부족한 측면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행정규칙 수: 약 2만여 건

- 또한, 사업 추진 관련 국민·관계기관 등 대외적인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견이 제시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자원 확보 필요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 등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규제개선 및 민생활력 제고 등 정부의 당면문제 해소에 적정 ○ 행정자원 확보 및 활용 수단 다소 모호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하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흡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하	○ 추진 일정의 구체성 다소 부족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사후심사 정비의견에 대한 부처 수용 여부 등 상시 모니터링 후 불수용 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정비 추진 독려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 협업 노력	하	○ 일상적인 협업 노력 수준 ○ 대국민 홍보 노력 부족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대안 제시에 관한 소관 부처 설득의 어려움 등 투입 노력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숨어 있는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부처의 원활한 입안 및 정책집행에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영업 시설·장비 기준 완화, 법정교육 부담 완화,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

*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및 51개 대통령령·부령 등 개정 완료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등 민생분야 행정규제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의 신속한 입법화
 - 55개 법령을 일괄정비하여 투자 촉진, 중소기업·서민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입법효과 조기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정비과제 지속 발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상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일괄정비함으로써 법제화 소요기간 단축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상	○SWOT 분석을 통하여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약점 및 위협요인을 도출한 후 충실하게 대응책 제시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추진 일정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법령정비 추진 과정에서 과제 불수용 부처 적극 설득 노력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상	○언론 홍보 노력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소지 등 정비 과정에서의 투입 노력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은 보통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 경제 활력을 높여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에 기여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신기술 규제특례와 관련된 규제샌드박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상 개선 사항의 신속한 검토 및 법제화 지원
-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한 원본규정 개선을 통하여 불필요한 종이 문서의 취급·보관으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 제고
- 각 부처가 개별법에 자동적 처분 도입 시 지침이 되는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개별 공공기관 보유 정보 중 연계·공유 가능 데이터 발굴 및 관련 법령정비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개선 외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법제 개선방안 모색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혁신적인 정책목표로, 구체성 및 적절성 높음.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정책환경 분석은 평이한 수준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하	○ 일부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함.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모니터링 방법과 수단이 미흡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일상적인 협조관계 수준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실제 도입 사례가 많지 않은 자동적 처분의 입법 가이드라인 마련의 투입 노력 고려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환류를 충실히 이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참여심사 114건 중 97건의 심사에 참여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85.1%가 심사안에 반영
 - 매년 국민참여심사 횟수를 확대하여 정부입법의 민주성 확보
- 법령심사 시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현장·실무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의 현실 적합성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민법제관 등 심사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 및 제도 실시로 인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가 모호하다는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효과 발생 여부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 검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반영하여 법제를 개선한다는 상위 성과목표에 부합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23년 국민참여심사제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24년 운영 계획 수립 ○ 국민관심법령 선정과 실제 국민참여심사 실시의 연계성 미흡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국민참여심사 실시 시기 및 횟수를 월 단위로 수립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양적 모니터링이며, 법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하	○ 국민법제관의 대표성 확보 미흡 ○ 국민법제관과의 협조체계가 상시적인지 여부가 불명확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부족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하	○ 국민참여심사 실시로 인하여 궁극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는지는 다소 모호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실무 집행 단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적극 검토·지원함으로써 민생 현안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뒷받침
- 소송제기 등 법적 분쟁 미연에 방지, 자문 의뢰 소요예산 절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령 상담·지원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하	○ 법령해석제도와 정책목표가 유사한 측면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전년도와 SWOT 분석이 동일 ○ 지방자치단체 대상 의견수렴·반영은 충실히 이루어졌으나, 중앙부처 대상 의견수렴 미흡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추진 일정을 계획 수립부터 결과 도출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세부적으로 작성하고, 계획대로 준수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중앙부처와의 협력에 한계가 있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 이용의 장애를 개선함으로써 만족도 제고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하	○ 해당 법령 소관 부처와의 상시적인 협조체계에 관한 부분이 불명확 ○ 법령검토 지원 대상 기관 중심의 소통 필요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대표성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다소 미흡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법제처의 역량을 활용한 결과로서 정책 기여도 인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불명확한 질의 요지를 법적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해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절차적 편의성 제고
- 대면회의 확대에 따라 관계인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도·만족도 제고
- 실무 검토 단계에서 협의·조정처리제도를 활성화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과 국민 편익에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령해석 수요가 많은 소관 부처와의 상시 협업체계 구축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하	○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석과 국민 참여 확대와의 관련성 미흡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하	○ 전년도와 SWOT 분석이 동일 ○ 민원인 대상 설문 내용이 다소 임의적 ○ 국민 참여 확대가 법령해석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모호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추진 일정을 계획대로 준수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가 무엇인지 불명확 ○ 안전 회신 기간 단축 노력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전년도와 동일, 다른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부재 ○ 법제처 내 다른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운영
6. 성과지표 달성도	상	○ 관계인으로 국민이 참여한 건수 성과지표는 법제처만의 노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지표인 점 고려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적극해석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 개통
-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집중 개선함으로써 웹(PC) 및 모바일 앱 모두에서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데이터 친화적 형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76만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고도화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자 만족도, 페이지뷰 수 등 다양한 통계자료 분석·활용 ○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 시스템의 성과지표 참고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추진 일정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했으나, 계획된 일정 중 일부 지연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시각장애인 대상 간담회,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리걸테크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및 결과 반영 ○ 다른 부처가 운영하는 사이트와의 연계 체계 마련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관 증가 수 성과지표는 법제처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점 고려 필요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	○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 구축으로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구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상권 살리기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수요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 신규 제작 및 고도화 서비스
- 지역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정보를 법령정보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생활조례 서비스를 개시, 법령정보의 완결성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도 성과지표 달성도가 약 88%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측면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존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서비스 이용자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전년도와 SWOT 분석이 동일 ○ 신규사업인 생활조례 서비스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콘텐츠 유형별로 일정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추진 하였으나, 기존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미흡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국민들이 접근하여 검색하기 쉬운 포털사이트를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자문단 운영 등 협조체계 구축
6. 성과지표 달성도	하	○ 서비스 활용도는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이나,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부족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전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충실히 이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 일상생활 관련성, 국민 관심도 및 정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가족관계, 경제·금융 분야 총 278개 법령을 대상으로 어려운 문장 정비 추진, 최종 정비안 312건 마련
- 알기 쉬운 약관 등 만들기 사업 추진, 112개 표준 약관·계약서·설명서 속 어려운 용어·문장 276개 발굴 및 정비안 마련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림·사진 등 시각 콘텐츠를 법조문과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확대 실시
 -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40개 법령 대상으로 484건의 콘텐츠 신규 개발·제공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안 반영 완료를 위한 후속 관리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하	○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정책수단의 체계성 다소 모호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상	○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의 방향성 수립 ○ SWOT 분석 결과 약점 및 위협 요소에 대응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일정을 구체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수립하여 이행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국회 지적사항,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적시에 반영 ○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다소 미흡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적절성을 상시적으로 확인 ○ 소관 부처·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개선방안 도출
6. 성과지표 달성도	상	○ 성과지표 2개 모두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이 높고, 부처 협업 및 현장 의견수렴 필요성 등 투입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국민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시적인 직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법제교육원 개원에 따른 중·장기교육과정 확대 및 다양화 등 법제교육체계 개선 추진
- 법제교육시스템으로 교육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전산화 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형성 단계에서 배점이 높은 평가지표(분석·의견수렴 충실성*) 획득 점수가 상대적으로 미흡

* 계획 수립 시 관련 통계 현황·사례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효과분석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제교육원 개원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책환경·정책효과 분석 보완, 사업계획 수립 시 분석 결과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이러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하	○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보완 필요 ○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추진 일정이 구체적이거나, 계획된 일정 중 일부 지연
4. 상황변화 대응성	중	○ 추가로 교육 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교육과정 개설·운영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교육 담당자, 대상자 및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법제교육 참가자 연인원 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교육 후 실무능력 향상 등 실질적 효과 파악은 곤란한 측면 ○ 전년도 평가 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충실히 이행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주무 부처와 협업하여 K산업별 수출 필수 해외 법령정보 제공(482건)
* K콘텐츠, K화장품, K의료, K원자력 등으로 제공 분야 확대
- 영세·중소기업 수요를 취합해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1,087건), 법령(109건)의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대외 경제활동 지원
- 번역본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감수 확대
-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집을 발간하여, 번역의 통일성과 정확성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 수요 파악 등을 통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분야 확대 등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제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정책목표와 대상이 명확하며, 방향성이 구체적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전년도와 SWOT 분석 내용이 동일 ○ 기업·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중	○ 상반기 운영 평가는 6월이 아닌 7월로 일정계획 수립 필요
4. 상황변화 대응성	하	○ AI 규제 법률 외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사례 부족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수요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서 부처 협조체계를 적절하게 구축·운영
6. 성과지표 달성도	상	○ 법령 수요자, 관계 부처와의 협업, 수요자 만족도와 전문성이 모두 필요한 고난도 성과지표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부처 협업사례로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등 정책효과 인정. 다만,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수출 기여 정도는 파악 곤란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준비위원회 발족을 통해 아시아 법제 기관들이 상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한 발판 마련
-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공적 개최
 - * 주제: AI와 법률의 만남, 아시아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 법령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법제 환경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대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법제교류 시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체제와 환경을 고려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절성	중	○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협의체 설립 추진
2. 분석·의견수렴 충실성	중	○ PEST 분석을 활용하여 분야별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 ○ 통계 분석 등의 활용이 보완될 필요
3. 추진 일정의 적절성·충실성	상	○ 사업별 필요 일정을 계획 수립부터 결과 도출까지 구체적·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이행 준수
4. 상황변화 대응성	하	○ 상대국의 요청 사항에 부응하는 대응력이 나타남. ○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지속 협력 시스템 마련 필요
5.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협업 노력	중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및 외국어 번역협의회 등 운영 ○ 교류 대상 국가의 학자, 전문가, 연구소 등 협의기관 다양화 등 검토 필요
6. 성과지표 달성도	중	○ 간접지표로 성과 측정에 한계 ○ 우리 법제의 전파로 인한 외국법제 반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연구 필요
7. 정책효과 발생 여부	중	○ ODA 사업 분야의 협업 활동이 잘 나타남. ○ 평가 결과 지적사항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6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 언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우수 자치법규 선정·포상 등 홍보 노력 강화 (12월)
8 (위법·부당 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	○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자원 확보 필요	○ 행정규칙의 체계적 관리 및 위법한 행정규칙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운영(1월) ○ 행정규칙 기획정비과제 발굴을 위한 추가 인력 확보(4월)
	○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업에 대한 홍보 실시 등 국민·관계기관 등과의 소통 노력 필요	○ 상·하반기 법령입안담당자 간담회 시 행정규칙 사전규제심사 및 정비 업무 관련 홍보·협조(6월, 12월) ○ 행정규칙 정비 실적 관련 대국민 홍보, 국민생각함을 통한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등 정비 필요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7월)
11 (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 정책효과 발생 여부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 검토 필요	○ 법령심사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참여심사 실시.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 입법예고와의 차별성이 없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국민법제관 모집 구성 다양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대표성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5년 국민참여심사 제도 폐지. 다만,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이어가고자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 국민 참여 노력을 지속하겠음(1월)
12 (신속· 정확한 법령 검토로 현장 고충 해결)	○ 법령 상담·지원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	○ 가칭 ‘종합 법제지원센터’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상담·지원 요청 창구를 단일화하고, 상담방식의 다각화와 유관부서 연계 상담·지원 등을 통해 종합적·체계적 상담·지원 제공(6월)

15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 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 기존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	○ 정확하고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생활법령 및 생활조례 등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1월~)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제고 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성과지표 설정 시 최근 3년 실적 평균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제고 방안을 충실하게 검토(3월)
17 (공무원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법제교육원 개원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책환경·정책효과 분석 보완, 사업계획 수립 시 분석 결과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SWOT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반영(3월)